

수능·내신 5등급 절대평가 되나 국교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전문가 토론내용 담은 연구보고서
시도교육청에 참고자료로 전달

현행 평가 체계의 한계 지적
과도한 경쟁 구조 개선 필요
정책 결정 전 논의지속 전망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둘러싼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능력시험과 학교 내신 성적을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전문가 논의 자료에 담겼다.

8일 교육계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이후 약 4개월간 진행한 전문가 토론 내용을 정리한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공유했다. 해당 보고서는 고교학점제 개선과 사교육 문제 완화 등 9개 분야의 혁신 과제를 담고 있으며, 공식 정책안은 아니지만 향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대입 제도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수능과 내신 평가 방식을 모두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상에 따르면 수능의 경우 1등급 기준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설정하고, 각 등급의 목표 비율을 20%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신뢰도 저하와 성적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논의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 1등급의 상한을 30%까지 허용하되, 목표 비율을 초과한 20~30% 구간의 학생에게는 ‘1-’ 등급을 부여하는 보조 등급제를 도입해 성적 불평리기를 억제 하자는 취지다. 내신 성적 역시 동일한 방식의 5등급 절대평가 전환이 거론됐으며, 단위학교별 평가 운영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대입 전형 구조와 관련해서는 수시와 정시를 분리 운영하는 현행 체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는데, 이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그동안 주장해 온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도 맞아 있다. 수능 중심 전형과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각각 가군과 나군으로 나눠 동시에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서울 주요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선발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이와 함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심화한 통합사회Ⅱ·통합과학Ⅱ 신설, 탐구 과목 선택 수 확대, 장기적으로는 대학 체제 개편 이후 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 가능성 등도 보고서에 담겼다.

다만 국교위는 이번 보고서가 위원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 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 논의 내용을 정리한 연구 성격의 자료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 여부나 시행 시점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등 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계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광명사랑화폐’ 누적 발행액 1조 달성

높은 할인율·가맹점 확대 주요
시민 일상 소비수단으로 정착

광명시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가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하며 광명시 대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지난 1일 기준 광명사랑화폐 총 누적 발행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첫 발행 이후 약 7년 만에 거둔 성과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30만 미만의 지방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액 1조 원을 달성한 것은 광명시가 최초다.

광명시는 지난 7년간 약 1조 6억 원(2026년 1월 1일 기준)을 발행했으며, 인구 29만 1천423명(2025년 11월 기준) 기준으로 매년 시민 1인당 약 49만 500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된 셈이다.

시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연중 10% 이상의 높은 할인율 유지 ▲8천 100여 개 가맹점 확대 ▲2025년 10월부터 도입된 소비 촉진 캐시백 제도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꼽았다.

특히 지난해 초 광명시가 전 시민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시민들의 이용 경험을 대폭 확대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선택한 비율이 1차(54.3%)와 2차(55.7%)로 경기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광명사랑화폐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사랑화폐 누적 발행액 1조 원 달성은 시민이 지역에서 쓰고 소상공인이 다시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광명사랑화폐가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경제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 정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시민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인천, 첨단 메디컬·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연세대 양자연구·송도세브란스 연계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가 ‘양자·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유정복 시장과 윤 총장은 8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면담을 갖고 송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양자 알고리즘·응용 연구를 선도하는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바이오 데이터 프로세싱 개선 ▲산학연 협력 강화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속한 개원 ▲글로벌 양자·바이오 기업 유치 ▲국가 양자 R&D 사업 유치 협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8일 연수구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설현장을 찾아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과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800병상 규모의 첨단병원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에 뜻을 같이하고, 필요한 추가 건축비는 연세대와 송도국제회복합단지개발(주) 기존 합의 기준에 따라 마련하기로 했다. 면담 후 양측은 양자컴퓨팅센터와 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서울시, 민간임대로 전·월세 불안 잡는다

LTV·세제 규제로 신규 공급 위축
청년·1~2인가구 주거 안정에 방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 를 통해 주택공급 솟음 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을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 현장을 찾아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며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제외돼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여기에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9000호에 불과해 공급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은 위축됐고 전세매물 또한 2024년 11월 3만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 가격은 작년 10월 0.53%, 11월 0.63%로 9월 0.

27%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임대를 통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겠다고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계획 발표 후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 시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층을 비롯한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맹그로브는 서울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 중이다.

오 시장은 현장 목소리 청취 후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덕성여대 혁신 중심은 ‘학생성공’”

김종길 총장직무대리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포럼’

덕성여자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종길)는 7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소재 안토그래드볼룸에서 ‘2025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포럼: 함께 그리는 덕성 혁신’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학이 지향해야 할 혁신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교내 혁신 성과의 파급과 확산을 통해 대학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포럼에는 교수·학생·직원 등 교내 구성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김종길 총장직무대리는 축사를 통해 “덕성 혁신의 중심을 ‘학생성공(Student Success)’에 두고, 입학부터 성장, 진

료, 취업, 졸업 이후 도약까지 이어지는 학습 여정을 촘촘히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또한 “성과가 대학 전체로 확산될 때 혁신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과 확산(Scaling Up)과 데이터 기반(Data-driven) 운영, 글로벌(Global) 확장을 혁신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덕성여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S등급(교육혁신 영역)을 획득하는 등 혁신 성과를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3년)까지 추진되며, 교육혁신 중심의 선택과 집중, 학생 맞춤형 전공탐색·설계 지원 등으로 혁신 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